

漁港予算 늘리고 投資促進해야할 까닭



金 成 斗

(朝鮮日報 전 논설위원)

한마디로 어항이라고 부르지만 그곳은 단순히 고깃배가 드나들며 정박하는 항구의 구실만을 하는 곳이 아니다.

어항은 곧 어촌이다. 어촌이 있는 곳에 어항을 만들었다. 그래서 어촌은 어항으로 되어졌다. 그랬기 때문에 어항은 곧 백만 어민의 소득의 터전이요 생활의 바탕이다.

어민을 보살펴 주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먼저 어항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밖에 없는 것이다.

어항은 고깃배가 출어준비를 하고 어부들이 휴식을 취하는 근거지이자 선수품을 공급받아 출항하는 고기잡이의 출발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어획물을 양육하여 소비자와 연결시켜 주는 유통의 시발점 구실을 아울러 담당하고 있다. 태풍이나 폭풍·해일등 자연의 재난으로부터 어선을 비롯한 어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차대한 구실까지 도맡고

있다. 어항은 이와 같은 구실을 유감없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어민생활이 향상되며 어촌사회가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그동안 정부의 어항대책은 말 그대로 격화소양지감(隔靴搔痒之感)을 자아내기에 족했다. 수산당국으로서는 하느라고 해 나왔지만 워낙 정부의 수산부문예산에 제약이 컸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업화 우선의 경제개발계획을 위해 전력투구를 감행해나왔다.

그 결과로 지난 20여년동안 공업화는 정말 격세지감을 일으킬 만큼 크게 진척되었다.

그러나 공업화의 급속한 진척과 이 부문의 괄목할만한 변화는 집중투자의 권외에 밀려나 있던 농업 수산업등 저성장부문의 낙후성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었다.

어항과 어촌 사회의 정체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 또한공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이 워낙 눈부신데 따른 것이다.

농림어업과 공업, 도시와 농어촌의 불균형발전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당면 최대의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낙후된 어항을 건설하고 근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히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항시설이 보잘것 없다는 것은 어촌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눈에 극명하게 비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어항개발계획은 지지부진으로 진척이 느리다.

그에 따라 자연재해에 따른 어선피해가 해마다 늘어 가고만 있는 것이다.

어항건설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지금의 추세대로 나가면 현재의 미흡한 건설계획이나마 완공을 볼 수 있는 시기는 앞으로 7년 후인 1995년이 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지금의 계획이 재빨리 완공한다 하더라도 어항과 어촌의 낙후성은 별로 개선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하물며 미흡한 계획이나마 완공될 날짜가 요원할 뿐이니 더 말할 것이 없는 것이다.

어촌과 어항의 지나친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좀 더 대담한 어항건설계획을 세워야 할 때이다.

재정에 대한 무리를 배제하면서 어촌과 어항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하여 불균형을 재빨리 시정하는 것은 어민복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으로도 환영할 만한 일인 것이다.